

JAPANESE RESEARCH CENTER NEWSLET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apanese Research Center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연구센터 소식지 제21호 2004년 6월 18일 발행인 김용덕

▶일본연구동향

일본국제정치학회에서의 ‘나카소네 외교(中曾根外交)’ 연구

- ‘일본국제정치학회 2003년도학술연구대회’ 발표논문 분석-

손기섭(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특별연구원)

1. 일본국제정치학회 2003년도학술연구대회

일본국제정치학회의 연차대회인 ‘일본국제정치학회 2003년도 학술연구대회’는 동경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바라기현 쓰꾸바시에서 개최되었다. 동 학회의 2003년도 학술대회의 공통논제는 “지금 왜 ‘제국’인가?”였으나, 공통논제 못지않게 다양한 연구논제가 각 연구부회에서 다수의 논문발표와 토론을 통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일본국제정치학회의 초청으로 한국에서는 안창시(서울대), 강태훈(단국대), 김병기(고려대), 손기섭(서울대) 등 5명이 한일 공동 심포지움을 비롯하여 몇몇 연구부회에 참석하였다. 2003년 10월 17일(금)에서 10월 19일(일)까지 2박 3일간 빈틈없이 강행군으로 짜여진 동 학술대회는 약 2000여명을 상회한 회원들의 열띤 참석과 토론으로 열기가 고조되었으며, 회원 대부분은 1박 2일 이상의 일정으로 와서 학술 토론과 친목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공통논제 및 각 연구부회의 논제는 다음과 같다.

공통논제 : 지금 왜 ‘제국’인가?

연구부회 1 : 유럽통합사의 재검토

연구부회 2 : 국제관계이론에 의한 일본 및 동북아시아의 제문제 분석

연구부회 3 : 냉전이란 무엇이었던가?

연구부회 4 : 역사로서의 일중전쟁 1937-1941

연구부회 5 : 지역분쟁의 현재 그 특징에 있어서의 계속성과 단절성

연구부회 6 : 일본에 있어서의 국제정치학의 성립

연구부회 7 : 한일국제정치학회 합동 심포지움 :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역주의

연구부회 8 : 한반도 안전보장의 국제관계

연구부회 9 : 21세기 유엔의 의의

연구부회 10 : 나카소네 외교의 재검토

연구부회 11 : ‘구성주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일년에 딱 한 번 열리는 동 학회는 국제정치학회답게 일본과 동북아 및 전 세계의 국제관계의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정치 쟁점과 학술적 문제들을 1년 동안 각 연구부회별로 집중적으로 분담시켜 연구결과를 모았다. 특히, 지극적 규모의 시대적 변화와 관련해서는 ‘냉전’, ‘제국’, ‘유럽통합’, ‘유엔’ 등 탈냉전기적 학술적 키워드가 주목을 끌었고, 일본 및 동아시아와 관련해서는 ‘북핵위기’, ‘일중전쟁’, ‘나카소네 외교’ 등의 외교정책 테마가 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흥미가 집중된 각 연구논제를 집약해 본다면 첫째, 90년대 이후의 탈냉전기에 있어서의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제국’의 역사, 배경, 국제정치적 의미 분석(공통논제인 ‘지금 왜 제국인가?’), 둘째,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시대적 함의 분석(연구부회 3의 ‘냉전이란 무엇이었던가?’와 연구부회4의 ‘역사로서의 일중전쟁’), 셋째, 동북아 국제관계에 대한 분석

(연구부회 8의 '한반도 안전보장의 국제관계'와 연구부회7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역주의'), 넷째, 일본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정책결정과 역할 분석(연구부회 10의 '나카소네외교의 재검토'와 연구부회 9의 '21세기 유엔의 의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 탈냉전기의 미국의 대외정책 행태와 관련하여 '제국'을 분석한 공동논제는 10월 18일 오후 출석한 전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홀에서 연구발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공동논제에서 발표된 논문은 山内昌之(동경대): [역사 속의 '제국' 페르시아전쟁에서 이라크전쟁에 이르기까지], 篠田英朗(히로시마대): [아메리카 '제국'의 사상적 배경 리버럴 디모크러시와 '역사의 종언' 재검토], 藤原歸一(동경대): [국제정치체계에 있어서의 제국의 문제 힘의 분포와 정책선택]이었으며, 지정토론자로서는 佐々木雄太(나고야대)와 田所昌幸(게이오대)가 맡았고, 청중석에서도 자유로이 의견개진을 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둘째, 국제관계에 있어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시대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로서, 연구부회3의 '냉전이란 무엇이었던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遠藤誠治(세이게이대학): 「냉전의 국제정치 구조」, 朱建榮(토요가쿠인대): 「냉전기 중국에 있어서의 국익과 이데올로기」, 石井修(메이지가쿠인대): 「미국외교에 있어서의 냉전」이었다. 지정토론자는 油井大三郎(동경대)이었다. '역사로서의 일중전쟁' 연구부회4는 松浦正孝(호카이도대): 「만주사변에서 대동아전쟁으로 범아시아주의의 정치경제사」, 笠原十九司(도쿄문과대): 「일중전쟁 확대와 해군」, 江田憲治(니혼대): 「중국의 시점에서 본 일중전쟁(가제)」 등 세 편의 논문이 제출되었고 지정토론자는 戶部良一(방위대), 山田辰雄(방송대)가 맡았다.

셋째, 동북아 국제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세 분야의 논제가 중심을 이루었다. 연구부회 2의 국제관계이론에 의한 일본 및 동북아시아 제문제의 분석에서는 宮下明總(도쿄국제대): 「구성주의와 일본의 안전보장정책」, 岡本至(대동문화대): 「정보의 비대칭성(게임이론)과 금융 빅뱅」, 泉川泰博(미야자키국제대): 「동맹의 제 이론과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 세 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북핵위기에 연구관심이 집중된 연구부회 8에서는 '한반도 안전보장의 국제관

계'를 테마로, 道下徳成(방위연구소): 「북한을 둘러싼 한미 및 미일의 관계」, 平岩俊司(시즈오카현립대): 「북한을 둘러싼 미중관계」, 中野潤三(스즈시카국제대): 「북한을 둘러싼 중러관계」 등 세 편의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지정토론자는 倉田秀也(교린대)였다. 그리고, 동북아 국제관계 분석과 관련하여 일본 국제정치학회의 2003년도 기획프로그램으로서 한일 국제정치학회 합동심포지움인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역주의: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는 김병기(고려대)와 오오바 미에(동경대)의 각각의 영문논문이었던 한반도 주변 4강의 안보정책과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역주의의 발전: ASEAN+3'를 토대로 지정토론자인 손기섭(서울대), 오오시마 료(히토츠바시대), 사회자인 안청시(서울대), 일본학회 이사인 다나카 아끼히코(동경대)를 중심으로 학회 내에서 한일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넷째, 일본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정치과정과 역할이 주목을 받았다. 연구부회10에서 '나카소네 외교의 재검토'를 주제로, 쿠사노(草野厚, 게이오대): 「나카소네 내각의 외교와 일본 국내정치 반응」, 가와카미(川上高司, 호쿠리쿠대): 「나카소네 외교와 미국」, 소에야(添谷芳秀, 게이오대): 「나카소네 외교와 동아시아」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지정토론자는 이오키베(五百旗頭眞, 교베대) 교수였다. 또한 90년대 이후의 탈냉전기의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의 유엔의 의의와 일본의 역할을 논의한 '21세기 유엔의 의의'란 논제로, 大泉敬子(동경정보대): 「인간의 안전보장 시점에서 생각하는 유엔의 평화활동 동티모르의 사례로-」, 則武輝幸(테이쿄대):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파탄국가의 재건」, 星野俊也(오오사카대): 「'국제 평화회복정책'의 구상과 유엔」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지정토론자는 横田洋三(츄오대)이었다.

본고는 상기의 다양한 연구논제 속에서 연구부회 10의 '나카소네 외교의 재검토'에 주목하여 발표논문의 요지와 주요쟁점을 분석하고 나카소네 내각기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일본 국내의 정치과정과 미국 및 아시아 요인에 대한 연구지평을 여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나카소네 내각의 정치와 외교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번 2003년도 연구학술대회가 나카소네의 정치외교를 연구하는 큰 계기를 이룰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나카소네 내각

은 1982년도 11월에서 1987년 11월까지 약 5년간 지속된 전후 일본의 세번째 장수내각으로서 내정상으로는 행·재정개혁의 강력한 추진, 외교적으로는 미일관계, 한일관계, 일중관계의 적극적 개선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다음에서는 동 학회에서 소개된 나카소네 외교에 관한 세 편의 논문의 개요를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나카소네 내각의 외교와 일본 국내반응 (草野厚)

본고의 연구목적은 82년부터 5년이라는 장기정권을 유지했던 나카소네 내각의 외교와 국내의 반응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단순한 사례연구는 아니며, 외교정책의 전개에 있어서 여당 자민당과의 관계를 나카소네 수상이 어떻게 구축해 나갔는가를 파악한 후, 5년간의 나카소네 내각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평가했는지와 복수의 외교사례에 있어서의 국내의 정치적 대립구도를 파악한다.

첫째, 나카소네 내각은 당시 자민당 최대파벌이었던 다나카(田中) 파벌의 협력을 얻어 탄생되었고, 내각 구성을 통해 거당체제를 발족시켰다. 1982년 10월 5일 당시의 스즈키 수상이 '미일동맹' 발언의 여파로 퇴진을 발표하자, 소파벌을 이끌던 나카소네는 다나카파벌의 중진 고토다(後藤田正晴)와 만나 그의 관방장관 입각을 요청하면서부터, 다나카파의 협력을 얻어 나카소네정권이 탄생되게 되었다. 나카소네파는 자민당내에서 네 번째의 규모로 힘이 약했으므로 다나카파벌의 전면적 협력을 얻어 정권운동을 꾸려가고자 했다. 따라서, 5회에 걸친 조각에 있어서 수적으로나 중요 포스트의 배분에 있어서나 항상 다나카파벌을 최우선적으로 안배했다. 특기할 점은 대장성 장관에 다케시타(竹下登), 외무성 장관에 아베(安倍晋太郎), 관방장관에 고토다 등 실력자들을 내각에 대거 포진시켜 상호 경쟁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각 유력 파벌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만전을 기했다는 점이다.

둘째, 장기정권에 속하는 나카소네정치의 최대업적은 '전후정치의 총결산'을 내세워 추진한 국철 분할 민영화, 전전공사의 민영화 등 국내정치의 개혁의 실현에 있었다. 나카소네정치의 최대의 과제는 민간

활력을 이용하여 경기를 자극하는 국내경제정책에 있었다. 한편, 재정재건을 내건 나카소네로서는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민간의 활력에 기대했던 바, 점차 민간의 지나친 부동산 투기과열을 유발해 80년대 후반의 거품경기로 연결된 한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다.

셋째, 국민의 눈에 화려하게 비친 외교에 있어서는 경제마찰이 존재하긴 했지만 최대업적은 역시 미일동맹관계의 돈독화에 있었다. 레이건 미국대통령, 대처 영국수상과 함께 소련에 대하여 서구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나타내는데 성공했다. 퍼포먼스뿐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정치외교스타일의 친근함과 세련됨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미일 경제마찰을 완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시장개방에 대한 업계의 저항과 관할권의 자유화에 대한 관료의 저항은 거셌고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거둘 수 없었다.

넷째, '방위비 GNP 비 1% 제한 철폐문제', '페르시아만의 소해정 파견문제', '미일 경제마찰' 사례에 나타난 국내정치적 반응구조이다. 방위비 GNP 비 1% 제한 철폐문제에 있어서는 87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방위비가 GNP 비 1.004%가 되어 실질적 돌파의 계기를 마련했던 바, 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에서도 아직 반대론이 높았던 만큼, 미일 신뢰관계에 배려하면서도 국내정치역학을 고려한 타협적 정책추진이었다. 페르시아만 공헌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소해정 파견문제'는 나카소네 수상이 미일협조, 서구동맹의 일원이란 자각 하에서 의욕을 나타내 외무성에 지시했지만, 고토다 관방장관 중심으로 신중론이 전개되어 취소되고 말았다. 미일 경제마찰은 일본의 대미흑자 팽창에 그 원인이 있었고, 미국의 비판이 점차 강렬해진 상태였다. 85년 9월 미국은 플라자 합의에서 '엔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통상법 301조를 과격하게 운용할 뜻을 비추었다. 실제로 반도체, 공작기계, 화장품, 농산물, 목재, 변호사, 운수, 건설 등의 분야에서 미국기업이 일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 나카소네 내각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으나 업계와 관료의 저항에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이후 90년대 중반의 클링턴 정권기까지 마찰이 지속되기에 이른다.

3. 나카소네 정권과 미국(川上高司)

본고는 나카소네가 '외교의 나카소네'로 불리워질 만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역사적으로 남는 성과를 올렸다고 파악한다. 본론에서는 나카소네의 대미정책이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 나카소네 대미외교의 특색과 사상적 근거를 분석한 후 그 성과를 평가하는데 주력한다.

첫째, 나카소네 외교방위정책의 제1차적 목적은 무엇보다도 대미관계의 강화에 있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미일간에 경제가 역전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일적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이 강화되어 미일 불협화음의 근거가 되고 있었다. 나카소네는 대미 무기기술 수출의 승인, 방위예산의 확보, 미군 주둔비용 부담의 증액, 페르시아만 소해정 파견 등의 정책결정에 있어 적극적 대응을 하고자 했다. 83년 1월 나카소네는 방미 직전에 한국을 방문하여 '40억 달러' 규모의 경제와 양국 정상간의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한일간의 마찰을 끝낸 후 레이건과 만나, 상기 정책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피력한다. 이로써 미일 외교방위정책에 있어서는 정상간의 프렌드십을 기조로 한 '테즈꾸리 외교'를 구축하였다.¹

둘째,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재정적자 2000억 달러, 국제수지적자 1000억 달러라고 할 정도의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만큼, 미일간의 갈등해소는 쉽지 않았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80년대 중반이 되면 전체 국제수지적자의 30~40%를 차지하기에 이르러, 일본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급등한다. 나카소네 내각은 계속적으로 자유화와 관세 인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85년 1월의 양국 정상회담에선 전기통신, 의약품·의료기기, 전자, 임산물 4분야에서 일본시장 개방을 위한 협의(MOSS협약)에 합의하고, '마에카와(前川) 리포트'에서 문제를 앞지른 대책강구 등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점이 레이건 정권 때 높이 평가된다.

셋째, 나카소네의 대미외교의 특색으로는 먼저, '론·야스 관계의 연출'을 들 수 있다. 나카소네는 얼굴이 보이는 '테즈꾸리 외교'를 전개하여, 재임기간 중 외국에의 공식방문은 24회를 헤아리며, 미국에는 7회 방문하여 레이건 대통령과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정상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여 상호 퍼스트 네임을 딴 '론·야스 관계', 즉 미일 정상간의 대등한 프렌드십을 실현시켰다. '론·야스 관계'는 일본인의 자긍심을 복돋우었으며, 실제로 나카소네의 인기상승을 통한 총선거에서의 자민당 지지를 상승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특색으로는 '전략가'로서의 나카소네의 외교수완인 바, 미일관계 강화, G7에의 적극적 대응, 한중일 정상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에서 두드러졌다. 나카소네는 종종 자신의 외교수법을 '테즈꾸리 외교'로 명명할 만큼 자유분방했으며, '화혼양재(和魂洋才)'의 인간성, 정치가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이 출중했고, 외교정책결정에 있어서도 '관저외교'의 비중이 높았다.

넷째, 나카소네 대미외교의 최대성과는 일본의 국제화에 있었다고 평가되며, 최고의 업적은 미일관계의 개선이었다. 동 내각 발족 당시는 미일관계가 전후 최악이라고 불리울 만큼 악화되어 있었는데도 나카소네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방위 경제 면에서 종래의 정책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적인 방향을 강구하여 타개했던 것이다. 나카소네는 '국제국가 일본'이란 키워드를 창안하여, 자유무역체제의 유지, 시장개방, 경제구조조정의 추진, 개도국 원조강화, 방위문제 터부불식, 미일유럽 협력 추진 등 국제국가로서의 일본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4. 나카소네 외교와 아시아(添谷芳秀)

본 연구보고는 나카소네의 개헌론과 자주방위론, 미일 기축주의는 하나의 전략으로서의 정합성을 가진다고 보며, 그 전략과의 관련성 속에서 나카소네의 아시아외교를 평가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나카소네

1 원래는 '자신이 손수 만드는 외교'란 의미이나, 나카소네의 경우 '정상간의 우호협력과 프렌드십을 증시하는 외교'를 의미한다. 나카소네 수상 자신이 '외교는 테즈꾸리'라고 강조하며 손수 전략적으로 접근했는데, 미일관계에서의 '론·야스 관계', 한일관계에선 '전두환·나카소네 관계', 일중관계에서는 '나카소네·호요방 관계'라는 정상간의 우호적 프렌드십관계를 구축했다. 仲曾根康弘, 『大地友情: 50年の戦後政治を語る』(伊藤剛・佐藤誠三郎インタビュー)(文芸春秋, 1996)

외교론에 있어서는 70년대 초 방위청장관시대의 자주방위론이나 대미 평등화 추진을 전통적 국가주의 자로서의 시도라고 강조하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수상 재임시의 나카소네는 미일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공적자리에서 아시아에서의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인정했다.

첫째, 전후외교의 시각에서 보면 나카소네 외교는 '좌'의 사회민주주의노선도 아니며, '우'의 전통적 국가주의노선도 아닌 중용적인 자유민주주의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카소네의 요시다(吉田) 비판은 '우'의 이념에서 비롯된 반발이라기보단 요시다의 불완전성 즉, 헌법9조와 미일안보조약의 양립에 대한 논리적 빈곤에 대한 비판이었다. 나카소네는 대미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미일관계의 구축을 꿈꾸었다. 요시다와 나카소네가 공통점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과 국제협조주의를 들 수 있겠으나, 나카소네는 한발 더 앞서서 냉전적 '좌'도 아니며 '우'도 아닌 '제3의 외교'를 지향했다.

둘째, 70년대의 나카소네는 자주방위론을 추진하면서 '비핵 중급국가론' 1970년 7월 나카소네 방위청장관이 자위대 고급간부에게 행한 훈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핵을 만들지도 가지지도 들여오지도 않겠다는 '비핵3원칙'과, '대국외교'가 아닌 '중급국가론'을 주장한데서 비롯한 양자의 혼합적 발전개념을 주장했다. 나카소네의 전략적 감각에는 요시다의 비틀림을 해소하고자 한 강렬한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었고, 이를 실현시키는데 실패한 것은 전후 일본외교의 비틀림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수상 재임시의 나카소네는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구축에 열심이었고 아시아 민족주의에 공감하면서 국제주의와의 조화를 도모했다고 판단된다. 나카소네의 사상적 배경에는 '아시아의 공생, 일종의 공동체를 회망하는 감성'과 국제주의의 원칙 하에서 민족주의의 연대를 추구하는 전략적 감각이 공존했다. 그의 일본민족주의도 이러한 면에서 상대화되었다고 평가된다. 한국과는 1983년 1월 중순 방한하여 7년간 40억 달러의 경협을 약속하면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과 냉전 하의 안전보장예의 현실적 융합을 시도했다. 동남아시아와는 농업, 에너지, 인적 자원 육성,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경협에 중점을 두면서 특히 일본과 아시아간의 '21세기 우정계획'을 기획

하고, 그 일환으로 청소년 교류와 인재육성을 강조했다. 인도 파키스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시아 민족주의의 연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인도의 비동맹주의에 '융합과 공존의 철학'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는 84년 3월 7년간 4,700억엔의 엔차관협력을 표명하고 조자양 총리, 호요방 국가주석과의 프렌드십을 돈독히 했다.

5. 연구의 평가와 비판

첫째, 나카소네 외교에 대한 연구의의 측면에서 보면, 세 논문은 비교적 연구주제를 잘 분담하여 나카소네 외교의 전반을 어느 정도 위치 설정하고, 대미 외교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으며, 아직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나카소네 내각기의 정치외교 연구에 디딤돌이 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나카소네 외교와 관련하여 쿠사노는 국내정치 반응, 가와카미는 미국, 소에야는 아시아로 나눠 연구분야를 분담하고 각각 독자적 시각에서 분석적으로 접근했다. 쿠사노는 외교정책의 내정과의 연계에 중점을 두면서, 대미외교에서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전략성이 국내의 내각 지지율과 여당인 자민당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후정치의 총결산, 민간활력의 과도한 자극 등은 나카소네 정치의 이념성에 의문성을 확산시켰으며, 80년대 후반 거품경제에로의 이행에 박차를 가한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나카소네·부시 정상회담 당시 통역관을 담당하기도 했던 가와카미는 대체적으로 나카소네의 외교업적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바, 그의 대미외교가 일본의 국제화와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보았는데, 너무 일면적임을 부인키 어렵다. 예를 들면 '불침항모론', '대국중시론'과 같은 좀 더 비판적 소재를 받아들이면서 저변을 분석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소에야는 자주방위론과 '비핵 중급국가론'의 분석에 중점을 두면서 아시아외교를 파악하는 바, 수상 재직 이전의 정책구상과 정책의 사상적 저변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주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아시아외교 분석에는 단편적 에피소드 소개 정도에 그쳤다.

둘째, 연구범위에 있어서는 쿠사노는 외교사례로서 방위비 GNP 대비 1% 제한문제, 미일 경제마찰, 페르시아만 소해정 파견문제, 가와카미는 미일 정상

회담에서 얻은 ‘론·야스 관계’, 소에야는 자주방위론과 아시아 각국 순방외교 등을 다루었으며, 부분적으로 자료와 내용 소개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판적 시각이 부족하고 다루는 내용도 빈약하다. 쿠사노는 미일 경제마찰을 제외하고는 대외정책의 국내정치적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내용이 빈약하며, 소에야가 다룬 70년대의 나카소네 외교안보 구상이 80년대 수상 재직시 어떻게 아시아외교 구상으로 연결되었는지 명확치 않으며, 좀 더 아시아외교에 대한 사례분석에 치중할 필요가 있었다. 가와카미는 대미외교에 있어서 외교안보, 경제마찰 양면을 고찰하여 연구범위에 있어선 충분조건을 갖추었으나, 경제마찰이 가속화된 근본원인 및 미일동맹의 강화가 가지는 국내외적 함의와 비판이 결여되었다.

셋째, 나카소네 외교 연구내용에 대한 평가이다. 쿠사노는 나카소네 내각과 거당체제, 나카소네 내각과 여론, 방위비·미일 경제마찰, 페르시아만 공헌책 등 정치와 외교 전반을 모두 아우르고자 한 점에서 의욕이 감지되나 약간 산만하다. 국내정치에 있어서의 행정개혁의 성과, 민간활력의 응용 등이 외교정책 즉 미일 경제마찰과 같은 분야에 있으선 상당히 다르게 작용했다는 평가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주요

대외정책 사례를 채택해 정책결정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라면 짜임새가 보다 컸을 법하다. 가와카미는 나카소네 수상의 대미외교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그 전략성과 국제성을 도출하는데 기여했지만, 비판적 평가의 검증이 약하다. 일중관계의 대표적 전문가인 소에야는 요시다와 나카소네를 비교하는 등 전후 일본외교의 시각에서 나카소네를 조망하고 있으며, 그의 평소 연구대상인 일중관계 연구와 부합시켜 일본의 동아시아외교 연구에 걸맞는 차후의 연구성과가 기대된다.

이상으로 일본국제정치학회2003년도 학술연구대회에 제출된 나카소네 외교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각 연구자들은 공히 나카소네 내각기의 정치외교가 그 내용면에 있어서나 정치외교 방법론에 있어서 매력적인 연구과제가 된다고 평가했다. 전후 일본외교에 있어서, 나카소네외교는 요시다외교, 사토외교(佐藤外交)와 더불어 최고의 창의적이고도 강력한 외교노선이었다. 나카소네 외교에 대한 학술연구는 연구내용의 풍부성과 독특성으로 인해 앞으로 일본 정치외교 연구의 주요 과제로 남을 법하며, 또한 연구적 관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일본연구센터 특강

일본연구센터 특강

본 일본연구센터는 국내외 저명한 일본 연구자를 초빙하여 좌담회 및 특강, 집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연구자 및 대학원생들에게 국내 일본연구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2004년 5월 동안 3번의 특강을 실시하였다.

1. 2004년 5월 6일(목)

강사 : 김용덕(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주제 : Japan's Modern Transformation

장소 : 국제대학원 신관(140-1동) 102호

김용덕 교수는 1980년 미국 하버드대학 동아시아 역사학과에서 「Land Tax Reform in Meiji Japan」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明治初 地租改正에 관한 기존의 여러 이론들을 재검토하면서 객관적 자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 하였다. 地租改正은 前近代의 수탈형태를 떨치지 않았고, 근대적 조세의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닌, 明治新政府의 시급한 국가건설을 위한 방책으

로 고안되어 추진된 것이었다. 明治政府에 있어 긴요한 문제였던 재정의 안정과 산업자본의 조달을 위한 제도적 준비였다는 결론을 내린다.」이라는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한 이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지금도 일본역사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1) 주요 강의 내용

금번 특강의 주요 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근대의 개념

근대에 관한 서로 다른 해석들은 근대화 이전의 전통역사와 근대사의 구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관한 두 가지 전형적인 이론으로 칼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의 주장이 있다. 칼 마르크스는 산업자본의 출현, 계급 투쟁 그리고 자본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근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칼 마르크스의 근대화 이론은 일부 서구 유럽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 프랑스, 영국 등이 그 예이다.

다른 한편, 막스 베버는 경제적 조건을 강조하기보다 사회적 합리주의 또는 사회 조직의 효용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근대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을 유럽의 관료적 합리주의로 설명했다.

그러나, 유럽과 달리 아시아나 남미 국가들과 같은 비서구 국가들의 역사를 살펴 보면 이런 해석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즉, 이 경우에는 마르크스와 베버의 이론이 비유럽 국가들이 경험한 근대화의 경로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에 있어 공통적인 특징은 현저하게 변화하는 전통 역사의 특징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 변화의 공통적인 특징은 폐쇄된 사회의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의 위협에 대해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쇄국정책으로부터 벗어나 서구에 문호를 개방한 것은 전통으로부터 근대로의 이행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운데 하나였다.

민족국가는 근대사회의 한 특징이다. 민족정체성은 그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많은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졌다. 즉, “일본의 민주사회, 시민사회, 또는 민족국가로서의 자기 인식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것은 근대사회의 여러 특징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근대 일본은 일본이 서구 국가들에게 그들의 문호를 개방한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근대 일본 역사는 외부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빠르게 발전했다. 이것은 자생적으로 사회를 발전시켰던 일부 국가들이 그들의 근대 역사를 보편적 방식으로 만들어 나간 것과 비교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근대 사회와 달리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외부의 압력 때문에 그들의 내부 요소들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외부의 영향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근대 사회의 특수한 변화로 알려져 있다.

이 특수한 근대화의 지도자들은 사회의 어떤 요소들은 발전시키고 어떤 요소들은 덜 발전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들은 문화적 발전보다는 군사나 일부 산업 발전, 사회/교육개혁 등에 우선권을 둔다.

나. 메이지 유신

일본의 지도자들은 변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서구 세력에 맞설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것이라 믿었다. 물론, 복지와 일반시민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으나 이런 식으로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을 근대화 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1840~50년대의 일본 지도자들은 일본국가의 힘을 동원하는 핵심이자 상징으로서 천황을 이용하려고 했다. 이것이 일본 근대화의 시발점이자 일본 근대화의 전형적인 특수요소(위로부터의 개혁)이라 할 수 있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이 외부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후, 그리고 일본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이전의 일본을 둘러싸고 요동 쳤던 변화의 결론이었다. 당시 산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러시아, 영국 그리고 미국과 같은 가장 강대국들이 이 변화에 관여하고 있었다.

일본 사회의 개방으로 국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도쿠가와 막부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 결과 일본 내에서 많은 문

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는 불황을 겪게 되었고, 소위 치외법권 조항으로 인해 외국인과의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원할 때마다 그 서구제국의 해군 세력은 일본을 위협했고 몇 번의 해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만큼 이것은 일본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였고 일본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다. 즉, 위협을 물리치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은 서구 제국과 동등한 나라가 되어야만 했다.

근대화 개혁은 일본 지도자들의 절박한 목표가 되었다. 개혁성향의 일본 지도자들은 도쿠가와 막부의 구 지도부가 사회의 전통적 요소와 연계되어 있어 일본을 근대화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반 도쿠가와 지도자들은 그들의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해 반 도쿠가와 연합 또는 협조 세력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다. 이러한 일본 내부 갈등의 결과 1868년 명치유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다. 메이지 정부

일본 메이지 정부는 오개항의 선언문(the Five Charter Oath)를 만들어 이를 기초로 일본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5개항의 선언문은 일본의 근대화와 새로운 사회 구조의 수립에 중점을 두며 일본 역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으며, 1867년 도쿠가와 막부 정권이 무너진 후 일본의 새로운 정부에 의해 시행될 주요 목표와 행동방책의 기본 틀과 같은 것이었다.

메이지 유신 초기 일본정부는 국력 강화와 시민들의 문명화를 위해 노력했다. 의무교육은 1873년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민들을 보다 근대화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일본의 농민들은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자녀를 집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여전히 전통 사회와 근대화된 정부사이에 갈등이 존재한 것이다. 예로 일부 사무라이들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1877년 내전이 시작되었다. 일년 동안의 내전이 끝난 후 메이지 정부는 안정되었고 모든 사회 요소들을 동원하여 1880년대에는 일본을 근대화하는데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많은 학자들은 일본 경제의 발전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1880년대 말경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70년대 일본의 근대화 방안을 강구하고 일본에 적합한 요소들을 찾기 위해 전세계 특히, 서구 국가들에 많은 사절들을 파견했다.

라. 전쟁과 팽창

한국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과 점차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1870, 1880년대 대원군이 통치하던 한국은 일본과의 협상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쇄국정책을 취하며 일본을 포함한 외국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근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 일본에게 있어 하나의 문제였다. 한반도와의 근접성은 일본이 무시할 수 없는 안보문제였다. 그들은 한반도의 변화에 대해 일본이 취약하며 일본이 서구의 위협을 막아내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나아가 메이지 정부는 그들의 힘을 우선 한국에 확장 후만주로 진출하고자 했다. 이것이 일본 팽창의 출발점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일본의 팽창 기도를 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와 중국은 이미 양국의 한반도 진출 시 상호 사전 고지할 것을 조약을 통해 명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이를 일본에 알리지 않았고, 결국 일본도 이를 빌미로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1894년 한반도에서 일본과 중국은 전쟁을 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 국민들은 중일 전쟁을 지지했다. 일본은 호의적인 국내외적 조건으로 인해 쉽게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여파는 일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 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조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세 나라에게도 중국은 중요했다. 프랑스는 남지나 지역에, 독일은 광둥 지역에 그리고 러시아는 남만주 지역에 대해 각각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국가들은 중일 전쟁 이후 체결될 시모노세키 조약에 강력히 반대했다. 일본은 삼국에 대항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게는 치욕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국제 세력들은 일본을 그들과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서 1904년 러일간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일

본 전함이 중국 랴오둥 반도의 한 항구(Port Arthur)에서 러시아 해군함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이 전쟁에서 일본 관료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100퍼센트 확신하지 못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미국에 그의 밀사를 보내 미국이 평화회담 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 러시아의 국내 사정 악화로 러시아는 일본과의 전쟁이 여의치 않았던 반면, 일본은 전쟁 지원을 위해 모든 자원을 총 동원했다. 결국, 일본이 이 전쟁에서도 승리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는 전쟁에 패했지만 포츠머스 조약에서의 일본측 요구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

일본은 전쟁의 승리한 대가로 큰 배상금을 기대했지만 러시아는 일본에 어떤 것도 제공하기를 거부했다. 일본 사절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와야만 했다. 승전국에 대해 어떤 배상도 없었기 때문에 1904년 일본 국내 사회는 동요했다. 일본이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황은 계속되었다. 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실제 성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또한, 군부 지도자들은 국가의 잠재적 위협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그들의 힘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일본 지도자들은 세계대전을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당시의 많은 국내 문제들이 러일 전쟁 후 배상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1차 대전은 일본이 국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 비록 1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지만 유럽 전장이 일본과는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에는 이익이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군사력은 강화되었고 동아시아로의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차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중국에서 유럽 세력이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일본은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일본 경제는 크게 향상되었고 많은 서구 세력들은 일본 군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일본의 경제 성장은 1차 대전의 첫 5년 동안 크게 향상되었다.

일본이 중국 시장에서 배타적인 독점이익을 얻고 있는 동안, 일본 지도자들은 중국의 국내 정치 문제에도 관여하고자 했다. 1915년 새로운 다이쇼 정부

하의 일본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21개 요구조항'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는 서구 국가들에게 반일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1917년 일본과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통제에 관해 회담을 했다. 여기서 미국은 중국에서의 일본의 이익이 경제적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일본의 군국주의

1920년대의 다이쇼 시기는 일본 역사에서 호경기와 불경기가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 동안 천황은 모든 정치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였다. 다이쇼 헌정체제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혼합형 입헌정치체제였다. 이 체제 하에서 천황, 내각, 군부, 의회, 지식인, 미디어 그리고 활동적인 노동조합 등이 다이쇼 정부의 통합된 하지만, 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만들어 내었다.

다이쇼 정부의 권력 통합은 그것이 열린 민주정부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본인의 관점에서 당시 일본사회는 혼돈 상태였고 외세의 위협을 막기에는 너무 약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당시 군부는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일본의 군사체제는 몇몇 사회 요소로 인해 필연적인 것이었다. 첫째, 명치 헌법에서 군부의 천황에 대한 직접 채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군부 지도자들이 천황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둘째, 일본은 서구 제국 세력과 동등한 힘을 갈망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지도자들은 일본의 미래 안보를 보장하고 세계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군부 지도자들은 동아시아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대동아공영권(Greater East Asian Co-Prosperity Sphere)의 구상을 통해 그들의 팽창 전략을 합리화했다. 즉, 일본의 확장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우월성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며 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통해 서양 세력을 물리치려는 것이다. 일본은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의 힘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논리였다.

이렇게 해서 15년간 계속될 서양 세력과의 전쟁이 1931년 만주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또한 서양 세력 이외에도 일본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중국, 베트남

과도 전쟁을 했다. 그리고 1940년 초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쟁에 연루되었다.

바. 전후 개혁과 국가재건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개항 이후 얻었던 모든 것을 잃었다. 미 연합군은 패전국 일본을 점령했다. 일본은 연합군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다. 일본 천황의 권력은 맥아더 장군에게 넘어갔고 그는 천황의 지위 박탈을 포함하여 일본의 어떤 체제라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1945년 이후 공산주의의 확장으로 인해 미국은 일본에 대한 정책을 바꾸게 되었다. 그들은 천황의 지위를 유지케 하고 일본의 힘을 다시 회복하여 소련의 위협을 막는데 이용하고자 했다. 또한, 맥아더 장군은 일본을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고자 했다. 그의 첫번째 조치는 한때 매우 중앙집권화 되었던 일본의 비무장화, 민주화 그리고 탈중앙집권화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은 경제회복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이 한국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전쟁은 일본이 1960-70년대 발전할 수 있는 경제회복의 기반을 제공했다. 그리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독립국가로 지위가 회복되었다. 그렇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중국, 인도 그리고 소련 등과 같은 많은 국가들이 배제된 것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조약으로 여겨졌다. 이로 인해 일본은 소련과 북방 영토와 관련해 미해결된 많은 문제들을 남기게 되었다.

국내적으로 전후에 일본 정부의 구조도 변화되었다. 천황은 더 이상 절대 주권적 통치자가 아니라 단지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모든 정치 권력은 다수 정당에 의해 구성된 내각에 위임되었고 군은 문민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는 자위대로 바뀌었다. 또한, 이전에 반 서구주의였던 일본 사람들은 극적으로 변하여 친미주의자가 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의 경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전후 일본의 군비 감축도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 이것은 전후의 폐허로부터 일본이 그렇게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또한, 38년 동안 일본 정치를 주도한 자민당 체제는 일본의 사회, 정치 상황을 안정시켰다. 1964년의 동경올림픽, 1968년의 오사카 박람회 등과 같은 국제 행사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을 높였다. 이로 인해 일본은 세계적으로 점차 평화적이고 안정된 사회이자 선진국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80년대 말 일본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경제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공산권의 붕괴로 인해 국제 질서가 변하였고 일본 경제는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약 10년 간 침체기를 겪었다. 많은 일본인들은 이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불렀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정보기술의 새로운 경향에도 적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 대만과 같은 작은 국가들에게 그들의 일부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를 거쳐 80년대에 이미 일본은 상당한 경제력을 갖추었고 경제 선진국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90년대 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다소 경제 성장이 둔화되긴 했지만 이제 일본의 경제는 안정되었고 다시금 서서히 성장하고 있다.

맺음말

이날 특강에는 국제대학원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일본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지역 비전공자들이 일본의 근대사를 이해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위 본문은 전체 특강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소개한 것이며, 참고로 이날 강의 전문(원문)은 추후 일본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2. 2004년 5월 13일(목)

강사 : 손 열(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제 : Japanese Political Economy

장소 : 국제대학원 신관(140-1동) 102호

손열¹ 교수의 일본 정치경제에 관한 기본 인식은

¹ 논문: 'Politics For Protection: Mercantilist Ideology, World System, and the Shaping of Protective Industrial Policy in Japan,' 시카고 대학 정치학 박사('94), 일본 정치경제 및 경제사상 전공.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일본의 핵심적 산업정책은 국내적 산물이 아닌 국제적, 특히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방어적 반응의 산물이다. 메이지 이래의 불평등 조약, 워싱턴 체제 등 강요된 자유무역 레짐 하, 즉 보호관세 설치의 수단이 결여된 외적 조건 하에서 일본은 내부적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의 창출에 집중하였고, 그 핵심은 외자계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고 순 국산 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었다. 오늘날 전형적 산업정책 수단의 성립은 이러한 방향에서 고안되었고, 그 결과 일본의 산업정책 수단은 기본적으로 보호주의적이고 배외주의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대외무역 마찰의 주원천으로 지목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특강에서는 일본 정치경제의 기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국가론(Developmental State)과 Main Bank System 등 금융제도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일본 정치경제의 본질을 살펴보고 향후 일본연구의 주요 의제를 모색해보고자 했다.

주요 강의 내용

금번 특강의 주요 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강의 목표

- 일본 정치경제 주요 연구성과를 검토해 봄으로써 정치경제의 본질 이해
- 정치와 국가의 역할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 요소 이해
- 일본, 독일과 미국식 자본주의 비교를 통해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해

나. 정치학과 경제학

- Classical Economics (Adam Smith)
 - 정치제도를 시장의 확대 및 강화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인식
 -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강조
- Marxism (Karl Marx)
 - 성장과 발전은 생산력의 지속적인 진보를 통해 이루어짐
 -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정치 구조간 갈등 유발

• Gerschenkronians (Alexander Gerschenkron)
Alexander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1962

- Gerschenkron 가설에 따르면 경제발전단계가 후진적일수록 신생 산업에 대한 자본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해 은행, 정부 등 특별한 제도적 요인의 역할이 강화됨.
- Gerschenkron은 영국과 독일의 사례 이외에 극단적으로 후진적(extremely backward)인 러시아의 경우 산업화 초기에는 은행 이외에 정부의 역할이 컸음을 설명

다. 다양한 자본주의의 형태

- 시장 대 국가: 개발국가와 규제국가(Chal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논의
 - 일본의 경제성장에 있어 정부 산업정책의 중심적인 역할 평가
 - 엘리트 관료주의, 개발주의, 시장형성, 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일 국제통상성)와 같은 선도 기관 주도
 - 과도한 규제의 위기
- 미국식 자본주의 대 일본/독일식 자본주의
- 자유시장경제와 계획시장경제
- 일본주식회사: 일본형 자본주의의 특징

라. 일본식 금융제도의 특징: Main Bank System
Masahiko Aoki and Hugh Patrick(eds), 1994, *The Japanese Main Bank System*, Oxford: Clarendon Press.

- 은행과 기업의 장기 관계
- 일본식 기업 거버넌스 형태(MB): 금융거래의 중심, 상호지분확보, 경영감독
- 일본의 장기고용제와 연공서열제
- 정부의 은행 감독
- 개발국가방식과 Main Bank 제도는 초기 산업단계에 유용

마. 일본 정치경제의 대변화

- 경제자유화, 탈규제화, 재정위기: 경제 변화
- 정치 스캔들, 냉전 종식: 정치 변화

바. 21세기 일본의 진로와 연구의제

- 1930~40년대 잃어버린 20년과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의 극적인 변화
- 구조개혁론
- 전후 일본역사 해석 문제 등

맺음말

이상은 이날 특강에서 논의된 일부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이외에도 일본의 정치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짧은 시간임에도 일본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특히, 일본연구의 주요 저서를 통해 일본 정치경제의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이날 강의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일본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강의였다.

본 강의의 전문(원문)은 추후 일본연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3. 2004년 5월 20일(목)

강사 : 박철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주제 : LDP Politics in Times of Trouble

장소 : 국제대학원 신관(140-1동) 102호

지난 5월 20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연구센터는 외교안보연구원 박철희 교수를 초빙하여 국제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일본연구센터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세 번째 특강이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연구자 및 대학원생들에게 국내 일본연구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일시: 2004년 5월 20일(목) 강사: 박철희(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주제: *LDP Politics in Times of Trouble*

주요 내용

이번 특강에서 박철희 교수는 위 내용과 같이 변혁기 일본 자민당의 정치를 중심으로 일본의 정치 흐름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강의했다. 특히, 일본 정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세가지를 지적하며 1990년대 일본의 불황기를 일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그는 이 시기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위한 준비기라고 평가하고 자민당이 현재와 같이 건재할 수 있었던 원인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일본정치의 흐름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일본의 주요 변화에 관한 인식

팸펠(T.J. Pemple)은 그의저서 'Regime Shift'에서 글로벌 경제와 함께 일본의 사회체제가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커티스(Curtis)는 55년 체제의 종식 이후 일본이 큰 제도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된 제도적 맥락에서 일본의 정치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흔히 일본의 90년대 불황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기는 심원한 변화의 준비기이기도 했다. 정치적으로도 93년 일본자민당의 55년 체제가 막을 내린 이후 일본자민당 연립정권은 이전과 다른 정치적 토양에서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민주당과 양당 구도가 강화되었고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일본의 정치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 11월9일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10석을 잃어 237석, 민주당은 무려 50석을 늘려 177석을 차지했다. 반면, 사민당, 공산당 등 혁신 야당들은 각각 6석, 9석으로 참패하면서 일본에서보수양당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보수세력인 자민당이 일당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혁신 세력인 사회당의 견제를 받던 '55년 체제'와 비교하면 혁신 정치세력의 쇠퇴가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의 일본 정계 재편을 회고해보면, 혁신 세력이 약화되고 정계 전반의 보수화가 진행되면서 보혁 갈등 중심의 일본정치가 보수 세력간의 경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5년 체제의 붕괴 이래 10년간 표류하던 일본정치가 '2003년 체제'라고 불리는 보수양당제로 정박할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치에서 보수정당의 약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민당의 약진 때

문이라기 보다는 변화를 거부하고 자기혁신을 외면한 혁신세력의 경직화가 낳은 산물이다. 우선 사회당 등 혁신 정당들은 90년대의 급격한 사회 변동을 직시하지 못하고 옛 질서만을 지키려는 구태의연함을 버리지 못했다. 이념은 혁신이라도 정치 자세면에서는 예전의 질서를 지키려는 사실상의 수구 정당이었다. 냉전이 끝났는데도 사회주의의 고수를 내세웠고, 일본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이익만 대변하려 하였다.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져도 그에 걸 맞는 국제적인 공헌을 원칙적으로 거부했다. 이로 인해 도시중산층은 점점 사회당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면서 수상이 된 사회당 당수 무라야마가 반자민, 호헌, 미일동맹 반대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루 아침에 부정해버린 것은 결정적이었다. 냉전 후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자민당의 움직임에 사회당이 동조하면서 자기 색깔이 없어진 것이다. '적과의 동침'을 통해 허물어져 내린 것은 자민당이 아니라 사회당이었다.

'90년대 정치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입된 소선거구제는 사회당과 공산당 등 소수야당을 더욱 약화시켰다. 중선거구제하에서 줄곧 '2위 정당'이라는 자리에 만족하고, 노조와 반자민층의 지지에 안주해왔던 사회당은 과반수를 얻어야 하는 소선거구제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현재 제1야당인 일본 민주당은 사회당과 다르다. 1996년 결성된 민주당은 반대정당으로서가 아니라 '대안정당'으로서의 대결자세를 내세우면서 자민당에 도전하고 있다. 1996년 이후 3번의 중의원선거, 2번의 참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다양한 보수세력을 흡수한 민주당은 자민당에 가를 수 있는 도전세력이 되어가고 있다.

방위안보정책 등 대외정책에서 자민당과 큰 차이가 없는 보수 야당이다.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사회당을 대체하면서 도시부 중산층의 지지를 받는 수권야당이 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권력의지는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300개의 선거구 중 267개 선거구에 후보를 낸 데서 알 수 있다. 전국정당(Catch-all Party)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자민당의 전략과 도전: 민주당의 성장과 공명당의 진로

일본의 주요 정당은 보수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양당제의 정착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우선, 공명당의 정치적 진로 선택을 유의해 보아야 한다. 자민당은 종교정당인 공명당과의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명당의 중의원 34석, 참의원 23석이 없이 자민당은 안정된 국회운영을 할 수 없다. 자민당의 공명당에 대한 선거의존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공명당이 자민당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소선거구에서 승리한 168명의 자민당 의원 중 42명은 낙선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공명당의 행보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민당은 공명당을 버릴 수 없지만, 공명당은 자신들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민주당은 도시부 무당파층의 지지를 받으며 짧은 기간 내에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선거에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35%가 자민당의 승리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응답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민주당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자민당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심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도시부 유동층의 지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아직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일본 국회의 또 다른 축인 참의원에서 민주당의 의석은 아직 66석에 불과하다. 올해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인 123석을 차지하려면 적어도 2~3번의 선거를 더 거쳐야 한다.

일본의 정당정치가 1955년 체제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수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양당제로 진화하리라는 예측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당분간 공명당과의 연합을 통한 자민당의 상대적인 우위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민당 정치에는 민주당의 성장과 공명당과의 연합에 의한 의존이라는 한계가 있다.

일본 정치체제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점진적인 쇠퇴와 야당의 성장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양당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공명당은 확고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자민당에게 중요한 연립파트너로서 존재할 것이다. 향후 공명당의 진로에 따라 일본의 양당제 출현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자민당 주도의 정치체제 부활을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로써는 야당의 세력이 여전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당 세력의 분열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치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의응답

Q. 실제로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가 선거에 참여하고 있나?

A. 총선거의 경우 선거인 가운데 60퍼센트 정도, 참의원 선거와 같은 경우에는 약 40~50퍼센트 정도 실제 선거에 참여하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포진한 야당이 점차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현재보다 더 많은 의

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Q. 과거의 야당들은 서로 다른 이념적 성향을 기조로 하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념적 차이가 바탕이 된 야당이 등장할 수 있을까?

A. 55년 체제 하에서 각 정당들은 이념적 차이를 기본으로 하여 나뉘어져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자민당과 민주당 간에는 큰 이념적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이념보다 각 정당의 정책 차이를 바탕으로 경쟁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점점 더 당의 이미지와 정책에 중요성이 더해질 것이다.

맺음말

이상과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한 3시간 동안의 강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 강의 후에는 앞에 소개한 내용 외에도 학생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으며, 일본의 국내정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일본연구센터는 이와 같은 특강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일본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제고하고 폭 넓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 故 김장권 교수 추모학술회의

동아시아의 로칼리즘, 내셔널리즘, 리저널리즘 -일본국가의 성장과 동아시아국제질서의 진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동아시아연구팀에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2차년도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故 김장권 교수 추모 학술회의도 함께 하였다.

일시 : 2004. 4. 17(토) 10:00-18:00

장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40동 2층
GLRoom

주최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동아시아연구팀

후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진행일정

10:00~10:40 개회식 및 추모패널

개회사 김용덕 원장(국제대학원)

故 김장권 교수 추모패널 — 한일역사교과서 공동
연구회 연구동향

1. 일본의 지역연구의 발전: 정진성 교수(한국방송
통신대학교)
2. 한중일 역사관련 논쟁: 박태균 교수(국제대학원)

10:50~12:00 Panel I 동아시아와 체제 전환
사회자 도진순 교수(창원대학교)

북한의 개혁조치와 시장의 제도화: 북한의 변화와
동북아시아

발표: 정영철 박사(국제대학원)

토론: 이정철 박사(삼성경제연구원)

중국해외투자과 중국과의 무역이 국내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의류산업을 중심으로

발표: 이옥지 박사(국제대학원)

토론: 이향순 박사(연세대학교)

13:30~15:20 Panel II 일본국가의 성장

사회자: 김태영 교수(강릉대학교)

글로벌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지역주민과
외국적주민 상호간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가나가와현
을 대상으로

발표: 조현미 박사(국제대학원)

토론: 최영호 교수(영산대학교 국제학부)

전후 일본영토 처리와 영토분쟁요인에 관한 고찰

발표: 최장근 박사(국제대학원)

토론: 박영준 교수(국방대학원)

일본정치경제관계에서의 '72년체제'의 발전과 전환

발표: 손기섭 박사(국제대학원)

토론: 진창수 박사(세종연구소)

사회자: 문우식 교수(국제대학원)

유럽통합과정에 나타난 교육문화정책의 변화와 대응: 동아시아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서

발표: 민문홍 박사(국제대학원)

토론: 정주연 교수(고려대학교)

16:10~17:00 전체토론

사회자 이근 교수(국제대학원)

15:30~16:10 Panel III 유럽통합의 경험과 동아시아

故 김장권 교수 추모호 안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2004년 가을호(9월 30일자 발행)는 故 김장권 교수 추모를 위한 일본지역 특집호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일본관련 연구자 분들의 많은 투고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문의〉

e-mail: rias@snu.ac.kr

TEL: (02)880-8975

실무간사: 하지영